

# 노동소득분배율로 본 노동자의 상태



이상학

전(前) 대한교육보험노조 위원장

“고비용 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화두다. 언론과 정부가 고비용을 초래하고 우리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범으로 고임금을 지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국 경제가 어렵게 된 책임이 마치 노동자의 고임금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붙이고 있어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노동자의 고임금이 현재 우리 경제위기의 '주범' 짚으로 간주되고 있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

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은 정말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을까? 노동자들이 경제침체의 '주범'으로 몰려야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노동자들이 높은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 배만 더 풀리려고 전세계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우리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범주에서 찾아보자.

## 1. 노동소득분배율이란?

87년 이후 노동자의 임금은 상당히 인상되었다. 명목임금의 인상은 물론이고 실질임금도 상승하였다.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제법 이루어지고 소득 수준이 상승하였음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 노동자의 소득상태는 어떠한가? 노동자의 소득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소득분배 상태와 함께 상대적인 소득분배 상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한 자신의 지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상대적 소득분배란 전체 사회 속에서 각 계급 계층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러므로 상대적 소득분배율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분배 상태를 알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두 계급 - 노동과 자본 -에 귀속되는 소득의 분배 비율을 말한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활하는 노동자(피고용자)와 자본을 투자한 자본가간에 소득이 분배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상대적 소득(relative income)이다. 상대적 소득분배란 전체 소득 중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소득의 총액과 자본가가 가져가는 소득 총액의 비율로 측정되며, 노동자가 가져가는 소득의 몫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국민계정상의 국내요소소득 중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도록 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에게 배분되는 소득이 많아져서 사회 전체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위치가 높아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면 노동자의 상대적 소득이 적어지고 노동자들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나라의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은 유량(flow) 개념인 소득분배 상태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득이외의 저량(stock)인 '부'의 분배 상태를 분석대상에 충분히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 등 '부'의 분배가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인 나라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지는 한계는 더욱 크다 하겠다.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노동자 내부의 소득분배 상태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

한계생산력설에 따르면 완전경쟁적 국민경제에서는 소득분배가 한계생산력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각 계급간의 소득분배는 시장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소득분배가 시장기능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노동소득 분배분을 계산하는데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총소득의 개념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가지는 기본적인 한계와 계산에 있어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국민경제의 소득분배 상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한 나라의 소득이 각 생산요소를 투여한 부분에 얼마나 배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론

다. 따라서 한계생산력설에 따르면 완전경쟁적 국민경제에서는 소득분배가 한계생산력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각 계급간의 소득분배는 시장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소득분배가 시장기능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주된 이유는 이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완전경쟁 시장과 한계생산물에 대한 측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등에서 찾을 수 있다.

## 2.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추이

〈표 1〉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추이

년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오소소득기준	50.1	49.2	50.8	52.8	50.6	50.3	49.3	50.9	52.9	56.6	58.2	59.4	60.2	59.7	59.3	59.9
GDP기준	40.3	39.5	40.2	41.2	39.7	39.5	38.8	39.8	41.3	44.5	45.5	47.0	47.4	46.9	46.3	46.6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연도

이 있다. 한계생산력설, 교섭력설, 독점도이론, 과부항아리 이론, 수요공급이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의 하나인 한계생산력설에서는 각 생산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시장에서 소득이 배분된다고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임금 은 노동자의 노동이 생산에 기여한 가치에 의해 결정( $w = P \cdot MPPL_L$ )된다. 열심히 일하여 생산성을 높이면 생산성을 높인 만큼 임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도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자본에 대한 배분이 결정( $R = P \cdot MPPL_K$ )된

위의 표는 80년부터 94년까지의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오소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동소득분배율과 GDP를 기준으로 한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 기준에 의한 노동소득분배율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80년에서 92년까지의 추세를 살펴보자. 표에서 우리는 8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은 83~86년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총소득 중에서 피고용자(노동자)의 분

배 몫이 커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국내의 총소득 중에서 자본을 가진 계층에 비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분배 몫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92년 이후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다. 87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노동소득분배율이 92년을 정점으로 하여 하락하고 있어 소득분배상대가 노동자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초반과는 노동자에 대한 분배분이 높

어났다면 노동자 전체에게 배분되는 파이가 커졌다 하여도 개인 노동자의 몫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소득분배율과 전체취업자 중에서 노동자(피고용자)의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노동자 개인의 분배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 3. 임금패리티

〈표2〉 노동소득분배율, 임금패리티 변화추이

년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노동소득 분배율(A)	50.1	49.2	50.8	52.8	50.6	50.3	49.3	50.9	52.9	56.6	58.2	59.4	60.2	59.7	59.3	59.9
피용자 비율(B)	47.2	47.1	47.6	49.4	53.0	54.1	54.4	56.2	57.0	59.2	60.5	61.0	61.0	61.0	62.0	62.5
임금패리티 (A/B)	106.1	104.5	106.7	106.9	95.5	93.0	90.6	90.6	92.8	95.6	96.2	97.4	98.7	97.9	95.6	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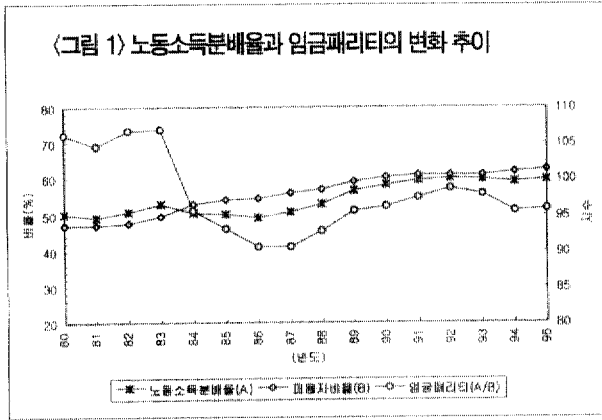
· 주 : A는 국내요소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된 노동소득분배율임. B는 피용자수/총취업자수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연도 재정경제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80년대 초반보다 총소득 중에서 노동자 개인에게 배분되는 파이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아졌다고 하여 노동자 개인의 생활의 상대적 지위가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졌다고 하여 노동자 개인의 경제적 지위가 나아졌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동자(피고용자)의 숫자가 늘

어졌다면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A), 전체 취업자 중에서 피고용자의 비율(B), 그리고 임금패리티(A/B)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임금패리티란 노동자 개인의 상대적 소득을 나타내어 주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이 노동자 전체의 총 파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개인의 상대적 소득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임금패리티는 노동자 1인당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 준다.

〈그림 1〉 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패리티의 변화 추이



위의 그래프는 노동소득분배율, 피용자 비율, 그리고 임금패리티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위의 그래프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8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임금패리티는 83-4년에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였으며 94년 현재에도 8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패리티의 추세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노동소득분배율은 80년 이후 전반적으로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83년부터 86년까지 하락하여 86년에 최저점에 도달하였다가 87년 이후 상승하여 92년을 정점으로 하여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7년 이후의 노동조합의 교섭력 향상과 경제상황 호전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인 이

유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92년 이후의 하락 추세를 우리는 주목하여야 하겠다.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동자의 상대적 지위는 도리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총취업자 중 피고용자(노동자)의 비중은

80년 이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임금패리티의 변화추세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80년대 중반 피고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83~86 기간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겹치면서 임금패리티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87년 이후 92년까지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과 함께 임금패리티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92년 이후에는 임금패리티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동자 1인 기준의 상대적 소득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노동자 개인의 상대적 소득분배 상태는 80년대 중반에 크게 하락한 이후 최근까지 80년대 초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86년을 저점으로 하여 상승추세를 보이던 소득분배 추세는 92년에 정점을 이루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노동자의 상대적 소득분배 상태는 80년대 초에 급격히 낮아진 후 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95년 현재 80년대 초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에 있다.

#### 4. 노동소득분배율로 살펴본 노동자의 생활

87년 이후 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노동조합이 교섭력을 가지게 되면서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었다. 임금상승으로 노동자의 절대적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만 상대적 소득분배 상태는 80년대 초보다 나빠져 있다. 87년 이후 92년까지 소득분배 상태는 개선되었으나 92년부터는 노동자의 소득분배 상태가 다시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87년 이후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으나 사회 전체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이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추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설문조사에서 노동자들이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사회민주화가 진전되었다는 90년대에도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가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악화되고 있음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추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고비용 저효율”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 중에서도 노동자의 임금을 고비용구조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자본측의 공세는 소득분배라는 지표를 놓고 볼 때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과거보다 소득분배 상태가 나빠진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올라서 경제가 어렵다’라는 논리로 양보를 강요하는 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국가 경제를 위해 자기의 몫을 양보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주문이다. 이는 가지지 못한 노동자의 몫을 더 줄이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몫을 더욱 늘려주자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소득(부)의 분배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유량(flow) 개념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분석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분배 몫이 80년대 보다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노동자들에게 현재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떠넘기려는 발상은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또는 경제의 어려움이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한 사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다면 전체 구성원의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 내부의 불평등이 계급과 계층간의 위화감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힘을 모아낸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를 요구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